

시위·집회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emonstrations and Assembly on Social Trust

김 강 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제1저자)
배 광 빈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 교신저자)

Abstract

Gangmin Kim / Kwang Bin Bae

The higher the level of protests and rallies, the lower the trust of the government along with the general trust accumulated throughout societ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trust was found to be more negatively affected than general trust,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level of trust.

General trust has been shown to affect the trust of the government in the event of protests and rallie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high general trust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trust of the government even if protests and rallies are high.

Overall,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short-term effort or temporary institutional to prevent conflict during conflict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effectively, it is effective to prevent conflicts by increasing social and cultural trust through long-term planning.

Keywords: conflict management, assembly, trust

I. 서론

공공갈등에 대한 관리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하였다. 「공공갈등관리 규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시간에 비해 갈등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김강민, 2023).

하지만 갈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의 여건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매우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관리가 성장한 현재의 관점에서 갈등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주요 관점들을 다시금 해설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공공기관 갈등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진행된 과정 중에 일상적 신뢰의 변화이다.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갈등 예방이나 해결 모두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갈등 예방의 관점이 갈등관리에서 가장 큰 효과로 평가받고 있다(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천대운, 2006; 정주진, 2010). 갈등 예방을 중심으로 한 갈등관리는 갈등 해결의 근시안적 관점보다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고려하여 다루어지는 개념이다(김재신, 2011). 다시 말해 오랜 시간을 두고 정착되어 나타나는 소통의 문화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신뢰 및 소통의 문화는 갈등 예방적 관점뿐 아니라 갈등 해결을 위한 속의적 환경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환경이다. 사회적 소통의 신뢰는 갈등관리에서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학문적 접근에서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갈등관리에서 사회적 신뢰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대상이 정부에 대한 신뢰이다(정주진, 2010; 김강민, 2011; 김재신, 2011). 정부의 신뢰는 사회적 신뢰보다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나타나고 쉽게 변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갈등 환경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부는 갈등을 관리하는 주요 주체이기도 하며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김강민, 2012). 갈등관리에 있어 시민단체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정주진, 2010). 하지만 사회적 신뢰처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에는 정권의 교체 때문에 쉽지 않다. 결국 신뢰와 소통의 문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특히 갈등 예방처럼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문화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통한 관점이라면 정부의 신뢰로만 판단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와 갈등의 관계에서 문화적으로 정착된 일반적 신뢰의 사회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신뢰와 소통에 대한 체감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로 갈등을 경험한 이해당사자가 쉽게 조사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의 경우 이를 판단하여 평가하기 쉽지 않다. 이에 갈등을 더 쉽게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대상인 시위 및 집회 활용하고자 한다. 또 한편에서는 시위 및 집회가 갈등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소통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에 시위 및 집회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신뢰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1. 사회적 신뢰와 갈등

사회적 신뢰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대상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 신뢰라는 개념은 무척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카페에서 귀중품을 두

고 자리에 비워도 도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문화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만약 절도가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면 사회적 공분이 발생할 정도로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를 잡았다(조선일보, 2022). 이러한 신뢰의 문화도 긴 시간을 두고 정착된 신뢰의 문화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갈등과 소통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신뢰를 주로 다루고 있다.

사회적 신뢰는 일반신뢰로 개인 신뢰 또는 대인 신뢰는 일부 특정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인 세부적인 신뢰와 불특정다수에 대한 일상적인 신뢰를 포함하는데 대다수 사회과학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일반신뢰이다. 일반신뢰는 사회인들이 주변 시민들에 대해 갖는 단체적 입장으로서 다른 주변 시민들이 이익을 위해 거짓 설득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선함과 정직성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그가 동료 인간을 선하고 정직하게 대할 것이라는 상대 의도에 대한 기대가 함축되어 있다(이수인, 2010). 일반신뢰 또는 일상적인 신뢰는 특정한 주변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뢰와의 비교하여 세밀하게 살펴보면 일반신뢰가 사회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 신뢰는 특징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Putnam(2000)은 일반적인신뢰가 구체적 신뢰와 다른 신뢰라고 주장했다. 타인에 대하여 신뢰하는 사회인이 일부 제도 또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고 정부신뢰가 일반신뢰에 영향요인 또는 종속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Yamagishi(2001)는 두가지 신뢰를 구분하면서 일반신뢰가 타인신뢰에 세밀한 내용의 정보를 가지지 않은 신뢰라면, 특정 신뢰는 일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세밀한 정보로 의존적 신뢰라고 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단체들에 대한 신뢰는 정보 의존적인 구체적 신뢰라고 할 수 있다(김재신, 2011).

일상적인 신뢰를 구성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 시민을 대표로 하는 대상이 시민단체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일반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도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급속하게 늘어났다. 시민참여, 경제정의, 환경, 생태, 생명, 평화, 양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내세운 시민단체들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시민과 소수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왔으며(주성수, 2006), 또한 사회구성원 간, 집단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 및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해왔다(김영수, 2004; 박상필, 2001; 정수복, 1996; 김재신, 2011).

갈등과정속에서 시민단체의와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공공갈등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준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2006년 이후에는 오히려 갈등을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 시민단체의 역할(임재형, 2007)을 보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와 갈등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처럼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도 개입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시민단체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사회적 계층과 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김강민, 2021). 정부의 경우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시민단체는 공

공갈등 뿐 아니라 일상적인 갈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일상적인 생활갈등이 공공갈등으로 전환되거나, 생활갈등으로 인한 사건사고(층간소음, 이웃분쟁, 주차갈등) 등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가지 이어지고 있어 일상적인 소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 갈등은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족으로 평가하고 있다(투데이신문, 2020). 이러한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있어 시민단체들의 역할도 활성화되고 있다.

2. 정부의 신뢰와 갈등

정부 신뢰는 정부의 구성요소와 범위 등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이 정부 행위에 대해 갖는 기대 혹은 태도라고 정의되며(Hetherington 1998; Miller 1974; Norris 1999),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맞게 공익을 위해 공공정책을 집행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이숙중 2006). 밀러(Miller 1974)는 정부를 넓은 의미에서 통치체제 혹은 공공기관으로 보았으며, 시트린(Citrin 1974)은 대통령 혹은 집권 정부로 한정 지어 보았다. 이에 관해 노리스(Norris 1999)는 이 같은 두 가지 측면이 서로 배치되기보다 연속선상에서 함께 존재하며 정부 신뢰라는 국민의 인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현 시대에 있어 정부 신뢰는 정부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야 할 자원이다. 정부 신뢰는 국민이 정부가 공공의 이익에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동참함으로서 정부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비판적 시각을 자제하고 정부정책추진 과정의 매물비용 등을 감소시키며 효율성을 높인다(Cooper et al. 2008).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좁은 의미에서 집권 정부의 정당성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며, 넓은 의미에서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사회제도와 공공기관의 존립이 국민의 동의와 신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원·조문석 2016).

민주주의 사회는 신뢰를 기반하기 때문에 구성원들간 신뢰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 간 불신으로 초래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이다(Dunn 1988; Ely 1980). 지칭하는 갈등은 공공갈등을 대상으로 하며, 넓은 범위에서 공공갈등은 그 원인과 결과, 범위가 공공영역에 속하는 갈등을 지칭한다(가상준 외 2009; Dukes 2006; Susan et al.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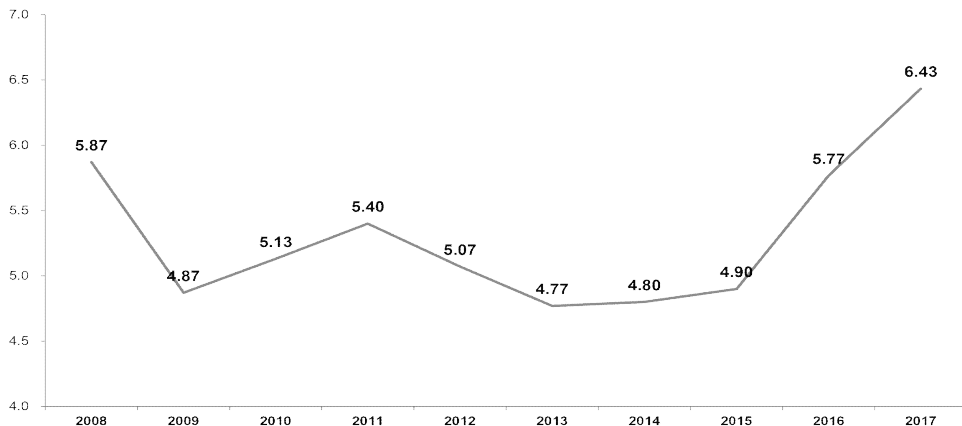
3. 시위 및 집회 문화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 '시위' 등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집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집회의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지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집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 목적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지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① 다수인이 ② 공동의 목적을 위해 ③ 일정한 장소에서 ④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집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수환, 2006).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위 및 집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상의 개념보다는 갈등이라는 범위 안에서 해석하고 갈등관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15년째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항목 중에는 공공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림 1〉 갈등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Q.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인 편이다 3. 긍정적인 편이다 4. 매우 긍정적이다

〈출처〉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http://ducdr.org/>)

위의 도표를 보면 10점 만점을 중심으로 보통 4~5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과 2016년에는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이유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 2016년 탄핵 관련 촛불집회가 영향을 주면서 갈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부분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정치 이념화 문제로 광화문 중심으로 시위 집회가 높게 발생하면서 갈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4~5점대를 유지하던 평균 점수가 3점대로 하락하였다(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2).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시위 및 집회일지라도 사회적 수용성과 인식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부분에는 일상적인 사회적 신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처럼 공공갈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갈등관리 연구들은 대부분 사례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갈등이라는 부분이 심리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유사사례도 다르게 전개될 수 있어서 심층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갈등관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김강민, 2012).

현재도 사례 중심의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새로운 공공갈등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고 현재는 사례연구뿐 아니라 통계연구 및 양적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양적 연구에는 공공갈등을 사건일지 방식처럼 분석하여 유형, 성격, 종류, 시계열 등 다양한 관점으로 갈등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으며, 본 연구와 유사하게 국민, 시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갈등에 대한 구조분석 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상준(2020)은 종료 방식으로 본 한국의 공공갈등의 특징을 어떠한 형태로 갈등이 종결되고 이후 긍정적 부정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가상준(2022)은 또한 이에 관한 후속 연구로 정치적 의사결정과 갈등 해결방식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혜영(2007)은 공공 부분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임재형(2016)은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갈등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한국 사회 환경 갈등의 발생 원인과 특징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공공갈등의 구조 연구를 지역으로 특정하여 수행한 연구도 있다. 임재형과 김강민(2012)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이라는 관점으로 화성시 화장장 건립 갈등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경기도 공공갈등 구조와 특징을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연구(2021)를 수행하였다. 김강민(2020)은 서울시 권역별 공공갈등 구조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연구를 수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연구 중에는 갈등의 해결관점보다는 영향을 준 요인분석을 중심으로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학린과 강명현(2009)은 공공 갈등 해결의 관점에서 미치는 결정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가상준(2010)은 공공갈등의 특성을 갈등의 강도와 시간을 중심으로 갈등관리를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안순철(2009)은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다양한 구조와 특징에서 시민단체들의 역할과 역량에 따른 영향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은 본연구와 유사한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주경과 김강민(2021)은 시민단체의 갈등 역량이 정부의 갈등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문재인 정부 동안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공공갈등의 심화가 이념화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같은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전형준(2010)은 공공갈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2008년과 2010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고대유와 김주경(2023)은 갈등 유형이 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를

정치이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신뢰도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김재신(2011)은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임재형과 김재신(2021)은 시민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의 역할과 신뢰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재신과 김강민(2011)은 시민사회 갈등 인식과 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평가와 전망, 정부 신뢰 간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김강민(2011)은 신뢰가 갈등의 민주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신뢰를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은 신뢰가 독립변수로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반대로 신뢰에 갈등의 수준이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특정 이슈로 인한 신뢰나 일시적인 신뢰가 아닌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된 신뢰와 소통이 갈등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정착된 소통이 정부의 신뢰에는 갈등관계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다른 선행연구와 차이를 두고 있다.

Ⅲ. 조사설계

1. 조사 대상

1) 인구통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표본 수 총 5,041명으로 남자 53.6%, 여자 46.4%이며, 18~29세가 15.4%, 30~39세 13.0%, 40~49세 17.6%, 50~59세 22.5%, 60세 이상 31.5%이다. 조사기간은 2017~2021년을 5년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표본추출, 면접,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매년 조사기간은 12월 한달 동안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의 표본크기는 전국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비례 할당 방법으로 할당 범주는 거주지, 성비, 연령으로 하였으며 추출틀은 유무선 전화번호를 램덤 생성하여 사용였다.

〈표 1〉 인구 통계적 특성

대항목	세부항목	빈도	%
성별	남자	2702	53.6
	여자	2339	46.4
	Total	5041	100.0
연령	18~29	776	15.4
	30~39	657	13.0
	40~49	885	17.6
	50~59	1134	22.5
	60세 이상	1589	31.5
	Total	5041	100.0
학력	중졸 이하	597	11.8
	고졸	1373	27.2
	전문대 재학중 또는 졸업	571	11.3
	4년제대 재학중 또는 졸업	2034	40.3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421	8.4
	모름/무응답	45	.9
	Total	5041	100.0
소득수준 (단위: 만원)	100만 원 미만	448	8.9
	100~199	411	8.2
	200~299	596	11.8
	300~399	734	14.6
	400~499	555	11.0
	500~599	650	12.9
	600~699	253	5.0
	700~799	214	4.2
	800~899	150	3.0
	900~999	77	1.5
	1,000이상	411	8.2
	모름/무응답	542	10.8
	Total	5041	100.0

2) 연구방법

주요 연구 방법은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AMOS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 상관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은 잠재 변수와 관측변수로 구분하였다. 잠재 변수는 시위 집회의 수준, 일반신뢰, 정부 신뢰로 제시하였으며, 시위 집회 수준은 시위 집회의 빈도, 시위 집회의 격렬성을 관측변수로 제시하였으며, 일반신뢰는 일반주변 신뢰도, 시민단체 신뢰도로 구성하였고, 정부 신뢰는 중앙정부 신뢰도, 지방자치단체 신뢰도로 구분하였다. 모든 관측변수

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기술통계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3.39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신뢰는 2.63으로 보통 수준에 있었다. 정부의 신뢰에 있어 지방정부가 2.92로 중앙정부 2.74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 집회에 대한 체감도는 발생빈도에 있어서 3.46으로 높게 체감하고 있었으며, 격렬성은 빈도보다 낮지만 2.80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기술통계

주요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적 신뢰	5041	1	5	3.39	1.053
시민단체신뢰	5041	1	5	2.63	1.199
중앙정부신뢰	5041	1	5	2.74	1.357
지방정부신뢰	5041	1	5	2.92	1.174
시위집회빈도	5041	1	5	3.46	1.285
시위집회격렬성	5041	1	5	2.80	1.292
유효수 (목록별)	5041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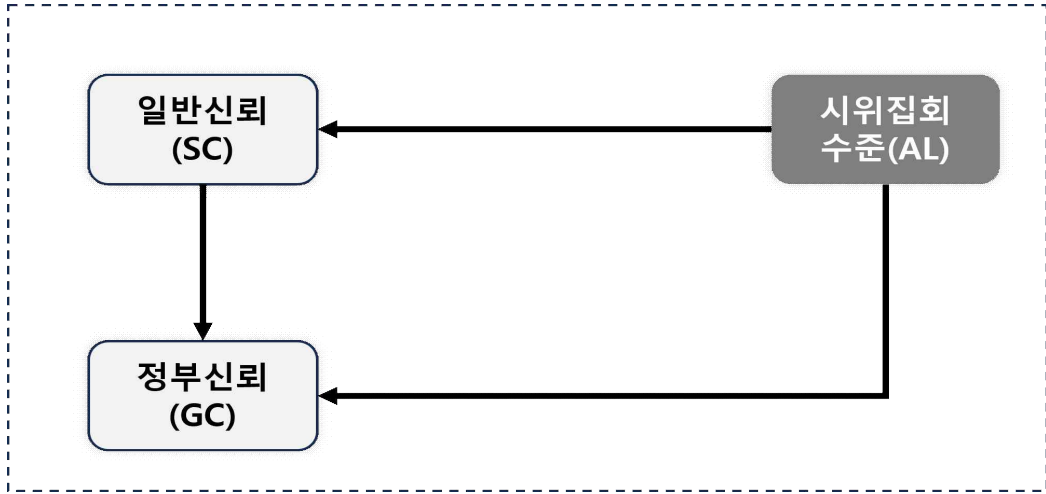
1) 잠재 변수

본 연구는 시위 집회 수준(공공갈등)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시위 및 집회의 수준에 따라 일반적 신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일반적 신뢰를 간접적으로 하여 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신뢰는 특정 이슈나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회적 생활문화 속에서 정착된 신뢰와 소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변수이다. 정부 신뢰는 정치적 선호도, 정부의 역량, 교체 시기 등의 특정 이슈나 사건에 일반적 신뢰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변수이다.

하지만 시위 및 집회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며 갈등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2) 관측변수

관측변수는 3개의 잠재 변수 아래의 2개씩 설정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위 집회 수준은 “시위 및 집회 빈도”, “시위 및 집회 격렬성”으로 구분하였다. 사회 신뢰는 “일상적 신뢰”, “시민단체의 신뢰”로 구분하였고, 정부 신뢰는 “중앙정부 신뢰”, “지방정부 신뢰”로 구분하였다. 사회 신뢰를 궁극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사항이지만 정부의 신뢰가 갈등관리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 신뢰가 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영향관계를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상호 신뢰 간의 차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정착된 신뢰 및 소통인가의 여부이며 정부 신뢰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정 이슈 및 정부의 성격에 따라 신뢰 및 소통의 여건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표 3〉 관측 및 잠재 변수 약어 설정

잠재변수		관측변수	
약어	항목명	약어	항목명
AL	시위 집회 수준	a1	시위 및 집회 빈도
		a2	시위 및 집회 격렬성
SC	사회신뢰	s1	일상적 신뢰
		s2	시민단체의 신뢰정도
GC	정부신뢰	g1	중앙정부 신뢰
		g2	지방정부 신뢰

3. 가설도출

1) 시위 및 집회 수준과 사회적 신뢰의 관계

본 지표에서 시위 및 집회를 통해 지표를 설정한 이유는 일반적인 갈등을 지칭하여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공갈등이라는 체감을 보다 강하게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더불어 일반적인 사회적 갈등이나 신뢰가 시위 집회라는 물리적으로 체감이 높은 갈등의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집회시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다른 자유 및 권리가 보장 받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사상과 주장을 집단으로 표현하는 권리가 도출된다(김영식·김학경, 2023)

신뢰와 공공갈등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됐다. 먼저 일반화된 타자, 즉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에 대해 여러 사회과학자는 이것이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박상필, 2000; Allen, 2001; Brown & Ashman, 1996). 이들에 따르면,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신뢰의 축적은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나가는데 필요하다(김재신, 2011).

이처럼 문화적으로 정착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갈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시위 및 집회가 잦아지면 사회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시위 및 집회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에(-)의 영향을 미친다.

2) 시위 및 집회의 수준과 정부의 신뢰 관계

대부분의 공공갈등이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행정 활동에서 발생하며,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정부는 공공갈등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며 관리자 혹은 조정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공공갈등의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에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김유환, 2008).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높아질 수 있거나 낮아질 수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점은 갈등으로 표출되며, 표출의 정도는 정부의 신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김강민, 2011).

정부의 신뢰는 전술한바 사회적 신뢰 속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보다 특정 이슈와 사건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시위 및 집회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신뢰에(-)의 영향을 미친다.

3) 사회적 신뢰환경과 정부 신뢰 및 시위 집회의 관계

신뢰를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 개념은 제도적 측면과 연결해 다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하에서 경쟁(갈등의 긍정적 견해)의 결과는 불확실해야 하지만, 경쟁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집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신혜라, 2005; 김강민, 2011).

일반신뢰는 사회 신뢰와 함께 시민단체와 정부의 신뢰와의 모든 관계가 상호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정부나 시민단체의 신뢰가 일반 사회에서 느끼는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강민, 2011).

이상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일반적 신뢰는 시위 및 집회와 정부의 신뢰에 간접효과를 갖는다.

4. 신뢰도 및 타당성

1) 신뢰도 분석

신뢰성은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 방법에 따라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채서일, 2002) 측정 결과에 오차가 들어 있지 않은 정도, 즉 분산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자료수집 단계에서 타당성과 더불어 신뢰성을 갖춘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노형진, 2005).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60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unnally, 1978).

아래 <표 4>의 세부 요인별 Cronbach's α 의 값을 살펴보면 시위 및 집회 수준, 사회 신뢰, 정부 신뢰 Cronbach's α 의 값이 .60이상으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신뢰도 수준은 적절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4> 신뢰도 조사 결과

잠재변수 항목명	관측변수 항목명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약어	항목명	
시위 집회 수준(AL)	a1	시위 및 집회 빈도	.637
	a2	시위 및 집회 격렬성	
사회신뢰(SC)	s1	일상적 신뢰	.637
	s2	시민단체의 신뢰정도	
정부신뢰(GC)	g1	중앙정부 신뢰	.610
	g2	지방정부 신뢰	

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잠재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관측변수들이 특정 잠재 변수들을 구성하는 관계에 중심을 둔 것이기 때문에 측정 모델에 속한다(배병렬, 2007).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일반적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한 부분인 측정모형으로 설명된다. 측정모형에서는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개념과 관측변수들이 함께 다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ver 21.0이 사용되었으며 최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사용되었다.

회귀계수(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표준화되지 않은 것으로 S.E(Standard Error)는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요인 AL(시위지회 수준)과 a1(시위 집회의 빈도)변수 사이는

$$C.R. = \frac{Estimate}{S.E.} = \frac{1.037}{0.095} = 10.898 \text{라고 알 수 있다. C.R.(Critical Ratio)은 회귀분석의 } t \text{값으로}$$

생각하면 되며, 경로계수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_0 : \beta_1 = 0$$

$$H_1 : \beta_1 \neq 0$$

여기서 $C.R. = \frac{Estimate}{S.E.} = \frac{1.037}{0.095} = 10.898 \geq \pm 1.96$ 이므로 대체 가설을 채택한다. 즉 경로 계수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계수들의 해석방식도 같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회귀계수

경로	Estimate	S.E.	C.R.	P	
a2 <---	AL	1.000			
a1 <---	AL	1.037	.095	10.898	***
s2 <---	SC	1.000			
s1 <---	SC	.511	.029	17.344	***
g2 <---	GC	1.000			
g1 <---	GC	1.416	.052	27.0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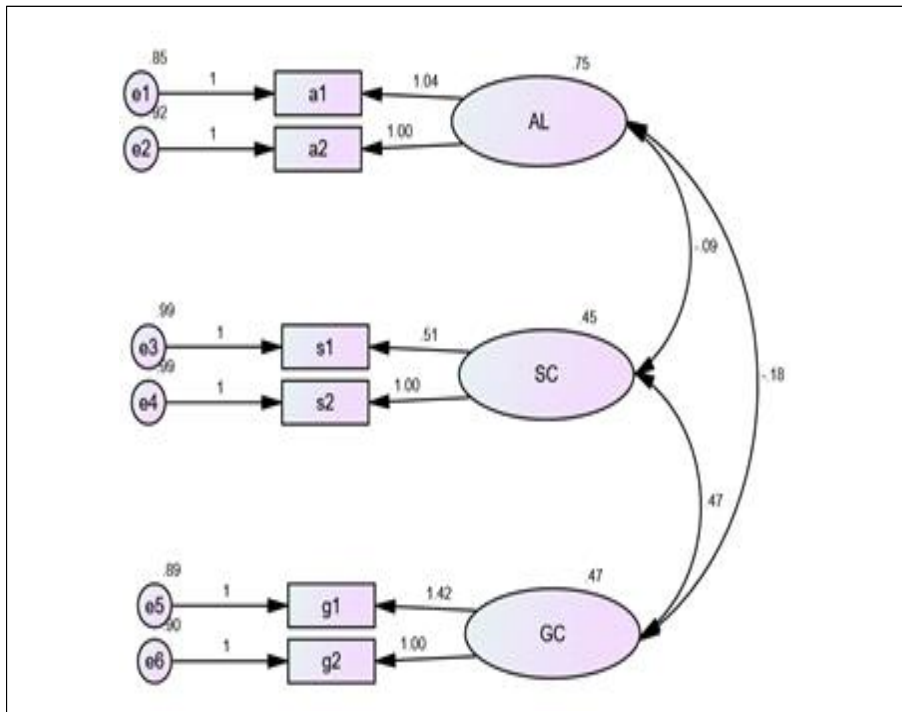
주. Chi-Square=58.678, df=6, p=.000
 GFI=.996, RMR=.031 NFI=.985, IFI=.987, CFI=.987, AGFI=.987

위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표를 살펴보면 분석모형의 최적 구성 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X^2 에 대한 확률(p) 값은 .05보다 낮아야 하며, 기초부합지수(GFI)는 권장수준인 .90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잔차 제곱평균의 제곱근(RMR)은 권장수준인 .05보다 낮아야 하며, 표준부합지수(NFI), 증분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조정적합지수(AGIF)가 권장.09보

다 높아야 한다(우종필, 2014).

본 적합도 조사결과 표준부합지수(NFI), 증분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조정적합지수(AGFI)가 모두 권장 수준이 .09이상을 보이고 있어 적합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X^2 에 대한 확률(p) 값은 .05보다 매우 작아 유의하며 잔차 제곱평균의 제곱근(RMR)도 .031으로 .05보다 낮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적합도에 있어서 적합수준에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주. Chi-Square=58.678, df=6, p=.000
 GFI=.996, RMR=.031 NFI=.985, IFI=.888, GFI=.987, AGFI=.987, CFI=.987

IV. 연구결과

1. 분석결과

각 요인 사이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을 보면 시위 및 집회 수준을 측정하는 시위 집회 빈도, 시위 집회 격렬성(-)의 관계를 보여 연구가설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상관관계

	s1	s2	g1	g2	a1	a2
s1	1					
s2	.183**	1				
g1	.221**	.402**	1			
g2	.221**	.342**	.421**	1		
a1	-.042**	-.055**	-.170**	-.084**	1	
a2	-.028*	-.060**	-.180**	-.052**	.46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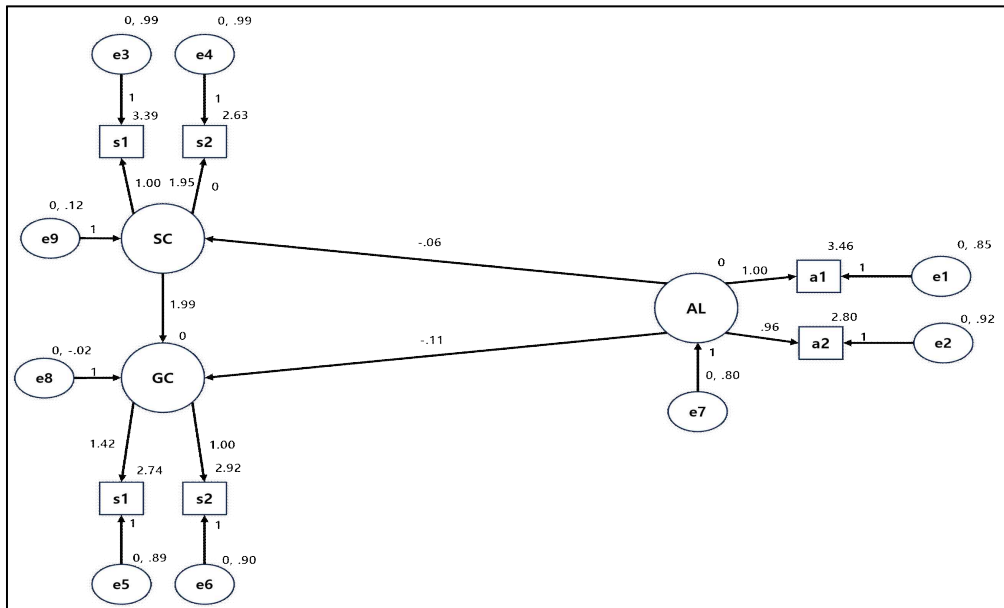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χ^2 의 통계량=58.678, 자유도(df)=6, 유의확률(p)=.000임을 알 수 있다. 귀무가설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은 기각된다.

본 연구 결과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기초부합지수(GFI)=.963, 비교적합지수(CFI)=.987, 표준부합지수(NFI)=.985, 증분적합지수(IFI)=.987로 대부분 기준인 .90이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EMSEA)도 .042로 .05보다 낮아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적합성은 높았다.

〈그림 4〉 연구분석 결과



주. Chi-Square=58.678, df=6, p=.000

RFI=.963, RMSEA=.042, NFI=.985, IFI=.987, TLI=.967, CFI=.987

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따른 각각의 경로계수를 표로 제시하였다. 집회 및 시위수준(AL)이 일반신뢰수준(SC)의 경로계수는 -.058로 나타났으며 표준오차는 .012, t값은 -4.869로 유의수준은 .000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값도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모든 값은 유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세부 경로계수 분석 결과

경로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SC	←---	AL	-.058	.012	-4.869	***
GC	←---	AL	-.112	.023	-4.865	***
GC	←---	SC	1.986	.160	12.427	***
s1	←---	SC	1.000			
s2	←---	SC	1.956	.113	17.344	***
g2	←---	GC	1.000			
g1	←---	GC	1.416	.052	27.011	***
a1	←---	AC	1.000			
a2	←---	AC	.965	.089	10.898	***

($p < .005$), *($p < 0.01$)

2. 가설검증

시위 및 집회 수준과 사회적 신뢰 관계는(AL→SC) 경로계수(Estimate)가 -.11이고 S.E(Standard Error)=.012이며 C.R(Critical Ratio)=-4.869으로 나타났다. 본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은 $p = .000$ 으로 $\alpha = .05$ 보다 낮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가설1은 채택되었다.

가설 1: 시위 및 집회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에(-)의 영향을 미친다.(채택)

시위 및 집회 수준과 정부 신뢰 관계는(AL→GC) 경로계수(Estimate)가 -.06이고 S.E(Standard Error)=.023이며 C.R(Critical Ratio)=-4.865으로 나타났다. 본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은 $p = .000$ 으로 $\alpha = .05$ 보다 낮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가설2은 채택되었다.

가설 2: 시위 및 집회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신뢰에(-)의 영향을 미친다.(채택)

일반적 신뢰수준이 시위 집회의 수준과 정부 신뢰수준의 간접효과를 갖는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직접 효과는 -.146이며 간접효과는 -.149로 나타났다. 더불어 총 효과는 -.295로 조사되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7〉은 해당간접효

과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갈등 발생에서 갈등 해결의 경로의 간접효과 유의확률이 .01으로 제시되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8〉 간접효과 크기 및 유의확률 정리

경로			개별경로분석결과		전체 분석결과	표준화 간접효과 크기 (AL→GC)		
			표준화 계수	t값	표준화계수			
AL	→ →	SC	-.150	-4.869	-.150	-.149 (-.1502 × .991)	p=.01<.05	
AL	→ →	GC	-.146	-4.865	-.295			
SC	→ →	GC	.991	12.427	.991			
독립변인			종속변인			99% CI		
						lower 5%	upper 5%	p
시위집회 수준 ---->			정부의 신뢰수준			-.196	-.092	.01

가설 3: 일반적 신뢰는 시위 및 집회와 정부의 신뢰에 간접 효과를 갖는다.(채택)

V. 결론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공공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없고 주변 환경에 영향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결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하지만 시위 및 집회라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은 결과 및 영향 요인에 대한 구체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위 및 집회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사회적 신뢰와 더불어 정부의 신뢰 수준을 조사해 봤다. 사회적 신뢰는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정착되는 대상이지만 정부의 신뢰는 발생하는 이슈 및 사건·사고에 의해 단시간 영향을 받는다. 이에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 정착된 신뢰의 수준이 정부의 신뢰수준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매개로 살펴봤다.

조사 결과 시위 및 집회가 높을수록 일반적 신뢰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사회적으로 시위 및 집회 수준이 높게 나타날수록 일상적인 신뢰와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 요소들인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시위 및 집회를 소통 방법의 하나로써 평가하여 평화적 시위 및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합법적으로 신고하면 집회를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로 보면 시위 및 집회가 사회적 소통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기보다는 공공갈등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위 및 집회의 수준은 일반적 신뢰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마찬가지로 시위 및 집회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신뢰의 경로계수는 -.06인 수치에 비해 정부 신뢰의 경로계수는 -.11로 조사되어 시위 및 집회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신뢰보다 정부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신뢰가 시위 및 집회가 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의 신뢰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위 및 집회가 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점에 있어 일반적 신뢰가 간접효과로서 정부의 신뢰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시위 및 집회가 많이 발생해도 정부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경로모형을 통한 간접효과의 결과를 보면 시위 및 집회라는 수단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 정착된 일반적 신뢰가 긍정적으로도 전환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시위 및 집회의 일련의 행위를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사회적 신뢰가 낮으면 시위 및 집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단시간에 제도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통에 노력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궁극적인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으로 정착된 사회적 신뢰는 시위 및 집회의 행위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판단을 통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보다 넓은 관점에서 소통의 창구로 인식할 수 있어 소통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한 환경에서 정부는 신뢰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높다면 갈등이 발생해도 정부의 신뢰를 긍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공갈등뿐 아니라 조직, 개인 갈등에서 항상 정보에 대한 신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사실적인 정보도 악의적으로 다루어지고 이해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높다. 갈등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정주진, 2010; 김강민, 2012; 김강민, 2011; 김재신, 2011). 사실관계가 명확한 정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나 소통의 과정들이 사회적 신뢰가 낮으면 잘못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회적 신뢰가 낮다면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도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해도 효과적으로 갈등을 관리하기에는 한계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는 갈등 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갈등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낮으면 갈등 예방을 통한 일련의 과정들이

크게 효과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갈등 예방은 제도적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갈등조기경보시스템 등 인위적으로 추진하여 효과를 보이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간 계획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이라는 대상이 사회적 신뢰에 주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체감한 이해관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사회인식이나 정치적 성향에 의존되어 평가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사례별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문헌〉

- 가상준(2010). “한국공공분쟁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공공분쟁의 강도와 기간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18(1): 27-51.
- 가상준(2016). “협오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정치관용 및 태도”, 『동서연구』, 28(3): 125-148.
- 가상준·신은종·임재형·김학린(2007).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데이터베이스”, 『분쟁해결연구』, 5(2): 137-167.
- 가상준·안순철(2010). “입법에 의해 종결된 공공분쟁의 특징: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6(2): 39-65.
- 가상준·안순철·김강민·김재신. (2013).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21세기 정치학회보』, 23(2): 193-210.
- 가상준·안순철·김강민·임재형. (2012). “정치·사회·경제 환경요인과 공공분쟁 발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4): 89-107.
- 국무조정실(2020).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 국무조정실. (2016)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국무조정실.
- 김강민(2012). “시민단체 및 정부에 대한 역량평가와 갈등지각의 관계”,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구소, 『사회과학연구』 38(3), 145~169.
- 김강민(2014). “한국지역개발분쟁의 일반적 구조와 분쟁기간별 특성”, 『지방발전연구』, 23(2): 495-541.
- 김강민(2011). “신뢰가 갈등의 민주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1-25.
- 김강민(2012) “시민단체 및 정부에 대한 역량평가와 갈등지각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8(3): 145-169.

- 김강민(2016). “경찰개입과 공공분쟁의 관계”, 「분쟁해결연구」, 14(1): 133-159
- 김강민·김재일(2015). “지방정부의 공공갈등 쟁점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항목 탐색과 적용”,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259-291.
- 김강민·김주경(2021). “시민단체의 갈등역량이 정부의 갈등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33(1), 33~61.
- 김강민외(2018). 「갈등관리와 협상」. 노스보스.
- 김계수(2010). 「구조방정식 모형」. 한나래아카데미.
- 김계수(2008). 「Amos/Lisrel 이용 인과분석 연구방법론」, 청람.
- 김계수(2011).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래아카데미.
- 김수환(2006).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2004년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p.3-4.
- 김재신(2011).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5(2): 1-16.
- 김재신·가상준(2014).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2010-2013”, 「한국정치학회보」, 48(2): 104-120.
- 김재신·김강민(2011)“시민사회 갈등인식과 정부신뢰: 공공갈등 평가와 전망, 정부신뢰간의 관계”, 「한국지방행정학보」 8(1): 135-148.
- 김태룡(2010)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사회: 사회자본의 기제로서 시민단체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2): 77-94.
- 김학린(2012). “공공갈등의 유형, 갈등관리방식, 시민단체개입이 갈등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345-369.
- 김학린·강명현(2009). “공공분쟁 해결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경영사학」, 51: 213-237.
- 김현구·이승중·최도림(2009). “정부신뢰의 지표체계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 분석”, 「행정논총」, 47(3), 1-24.
- 나태준(2005).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연구원.
- 노형진(2005). 「SPSS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출판사.
- 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상·하」, 논형.
- 안순철·임재형(2009) “한국의 공공분쟁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 「분쟁해결연구」, 7(2): 49-75.
- 양건모(2007). “정부신뢰 개념의 이론적 논의 및 타당성 검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임재형(2019). “한국의 시민단체가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 기간과 강도를 중심으로”, 분쟁해결

- 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17(1), 75~105.
- 임재형(2007). “한국의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10(2): 219-235.
- 임재형(2008). “비선호시설건설 관련 공공분쟁의 특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11(1): 1-23.
- 임재형(2010). “한국 정치사회 공공분쟁의 특징과 해결 양상”,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2): 63-84.
- 임재형(2016)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갈등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Oughtopia 31(1): 243-265.
- 정주진(2010).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아르케.
- 채서일(2002).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 천대윤(2011). 「갈등관리와 협상 전략론」. 선학사.
- 최봉기(1988). 「정책의제형성론」, 서울: 일신사.
- 하혜영(2007).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허영(2001). 헌법이론과 헌법, 서울: 박영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데이터베이스.

조선일보. 카페 자리 비우자 휴대전화 훔쳐 도망... “안전한 나라 이미지 깎다”부글, 2022.7.13. 김진아 기자.

- Allen, J. C. (2001).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within an interactional field.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119-120.
- Brown, L. D. & Ashman, D. (1996).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intersectoral problem solving: African and Asian cases. *World Development*, 24, 1467-1479.
- Curle, A. *Making Peace* London: Tavistock.
- Deutsch, M. *Resolution of Conflict*.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Dunn, William N(1981). *Public Policy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arch. F. G, &Simon. H. A(1996). *Org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Miller, A. H(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 Ronald, J Hustedde, Steve, Smutko, Jarad. J. Kapsa(2004), *Public Conflict Resolution: Turning Lemons to Leminade: A Training Workbook for Extension Educators and CommunityLeaders on Public Conflict Resolution*. Southern Rural Development

Center. SRDC Series.#221.

접수일(2023년 06월 09일)

수정일(2023년 08월 15일)

게재확정일(2023년 08월 23일)

〈국문초록〉

시위·집회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시위 및 집회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전반에 누적된 일반적 신뢰와 함께 정부의 신뢰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신뢰는 일반적 신뢰보다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신뢰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신뢰는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일반적 신뢰가 높으면 시위 및 집회가 높게 나타나도 정부의 신뢰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갈등관리 중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단기간 동안 노력이나 일시적 제도적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간계획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갈등예방에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법·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에 의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소통의 활성화와 신뢰의 회복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갈등관리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

주제어: 갈등관리, 갈등예방, 시위 집회, 신뢰

김강민(金剛民: 제1저자)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논문: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관한 연구)하고, 현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로는 공공갈등, 정책평가, 공공갈등분석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시민단체의 갈등역량이 정부의 갈등역량에 미치는 영향(2021)”, “The Roles of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ublic Conflict Resolution: Focused 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2018)”, “갈등관리와 협상(2018)” 등이 있다(morning_call@hanmail.net/kgm0432@dankook.ac.kr).

배광빈(裵洸彬: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달라스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 행정, 성과관리, 전자정부, 비영리 조직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differing Effects of individual-and group-based pay for performance on employee satisfaction: the role of the perceived fairness of performance evaluations(2021), How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telework program in U.S. Federal agencies: Examining the effects of being a female supervisor, supportive leadership, and diversity management(2019) 등이 있다(e-mail: kbae@dongguk.edu).